

‘교통사고’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보니…

큰 소리 친 사람 60%가 ‘거짓’

전남경찰 262명 조사…되레 형사상 불이익

지난해 12월 초 광주시 북구 유통교차로에서 김모(43)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이모(39)씨가 물려 2.5t 트럭이 충돌했다. 좌회전하던 김씨와 직진하던 이씨는 모두 녹색 신호를 보고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은 전남지방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 조사 단계에서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테스트 직전 겁을 먹고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와중에 좌회전했다”고 실토했다. 이씨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뒤 “황색 신호였지만 그대로 운행했다”고 털어놨다.

교통사고 발생 후 대부분의 운전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는 속설을 믿고 일단 우기고 보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제 ‘우기는 게 유리’ 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말탐지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운전자 절반이 ‘거짓’이란 판정을 받아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교통사고 운전자 262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 결과 ‘판단 불능’으로 나온 53명을 제외한 209명 가운데 123명(58.8%)에게 ‘거짓’ 반응이 나왔다. ‘진실’반응은 86명으로 41.2%였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한 사고 원인은 신호위반이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음주운전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상당수가 사고 현장에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우선 부인한 뒤 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을 덮어씌우고 보자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앞에서는 검사관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진정까지 넣었다가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후 상방 간 주장이 틀리거나,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사례가 증가하자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의 혈압·맥박수·호흡 등의 생리현상을 기록하는 기계.

각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이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진위성을 판별한다. 다윈기록기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경우 1924년부터 경찰 신문과 조사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산 거짓말탐지기 1대(2천216만 원)를 도입, 2004년 7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목격자나 물적·인적 증거가 없는 경우 ▲서로 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고

▲뺑소니 사건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 사건에 주로 사용된다. 조사항목은 10여 개이며, 진술을 할 때

▲호흡과 손가락 피부의 전기반응 ▲

심장 반응수의 미묘한 변화 등을 측정해 진실 여부를 가린다. 조사시간은 1시간30분~2시간 소요된다.

전남지방경찰청 박태준 교통사고 분석센터장(경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대부분 증거자료로 인정된다”며 “앞으로 탐지기의 운용을 더욱 활성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청 비정규직 “고용 승계” 시위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회원 등 30여 명이 7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3층 시장집 복도를 점거한 뒤 월otto를 벗은채 행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새 청사관리 업체에 성실한 응원들의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시위 응원들은 이업체의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룸촌 일대 개짖는 소리 ‘시끌’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촌 일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촘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를 키우는 주민들이 늘면서 개 짖는 소리로 시끌.

○…7일 광주시 서구 쟁촌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하룻밤 사이에 3~4개가 한꺼번에 털리는 등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지만, 신고해도 소식 없는 경찰들 대신 자구책으로 개를 기르는 집들이 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반상회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개를 키우거나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2종, 3종으로 강화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개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고 경찰 방범활동에 불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거 활동과 함께 이 일대에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해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고 해명.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무원 응시원서 학교명 없애야”

국가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식품의약품 안전성이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출신 학교이름을 적게 하고 지원 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32)씨가 “식약청이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연구·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 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

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출신학교 이름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것은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대학 서열에 대한 인사권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에도 특별채용시 학력제한을 가능하게 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함평 축사에 화재

돼지 330마리 태워

7일 새벽 0시29분께 함평군 죽전리 노모(51)씨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330여 마리와 축사 200㎡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축사 배전반이 심하게 탄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성폭행 피해 여성 성추행

경찰관에 실형 확정

현장검증을 핑계로 성폭행 피해 여성은 또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7일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 여성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경찰관 임모(3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성폭행 사건 현장 검증을 나간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거부에도 범행 상황을 재연하도록 강요하고 스스로 옷을 벗고 여성에게 접근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